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ley@makehope.org)

I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제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천,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 키워드 주민참여 확대방안, 주민자치, 거버넌스, 일본 마을만들기 사례

1.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¹⁾를 말한다. 사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대표에게 위임하여 통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의원을 뽑는 기간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루소의 말처럼 민의와 결정권이 분리된다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으나 4년에 1번 실시되는 선거의 특성과 지역에 따른 특정정당 선호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제작소는 주민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결정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교육, 주민토론회 등 다양한 주민교육을 제안하는 동시에 더 많은 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주민교육프로그램, 마을계획, 참여예산제도, 주민토론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복참여, 정보제한과 실제적 권한의 부재, 주민자치의 경험부족 등 주민참여의 한계지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²⁾을 열고, 현재 주민참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으로는 주민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비참여와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분류하고 세분화한 Arnstein(196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참여의 권한이 행정에만 집중된 경우, 주민들은 계도와 교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를 ‘비참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나 여전히 행정이 주도성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적 참여단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거나 오히려 주민들이 행정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참여가 있다. 이 이론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의 권한이 주민에게 위임되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

1) Verba and Nie(1972)는 ‘일반시민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진이나 이익집단 참여처럼 정치적으로 볼 수 없는 참여,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비제도적 참여는 제외하고 있다. 반면, Martin(2006)은 ‘선거부터 정책집행에 이르는 정치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주민참여로 간주하여 정부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은 시민과 유사하나 지역과 관련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특수계층이나 엘리트가 아닌, 보통사람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은 2016 서울마을주간의 일환으로 서울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희망제작소의 공동주관으로 2016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일본과 스위스에서 초청한 해외강연자가 참석하였다.

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는 논점을 제시한다.

구 분	단 계	내 용
실질적 참여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이 원할 때 자발적,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주민투표, 감사, 소환 등)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공무원보다 지배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우 ex) 주민들의 정책거부권 보장
	동반자 (Partnership)	시민과 협상을 통한 공동결정 및 책임 ex) 협의회, 공동위원회 등
형식적 참여	유화 (Placation)	시민참여적 기획 ex)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정책위원회 구성 및 정책반영
	의견수렴 (Consultation)	숙의적 자문 ex) 시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
	정보제공 (Informing)	일시적 주민 대상의 자문 ex) 여론조사, 패널조사 등
비참여	교정(Therapy)	쌍방향 정보소통 ex) 공청회, SNS홍보 및 반응채집을 통한 반영 등
	계도 (Manipulation)	일방향 정보소통/일방적 소통 ex) 대중캠페인, 웹사이트 홍보 등

[표 1] Arnstein의 주민참여사다리

179개의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주민참여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주민참여에 대해 분석한 연구³⁾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심의를 위한 위원회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갈등사안에 대해 현장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정책 제안이나 실행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참여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등 주민이 주체가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역량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장 교체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곳도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정정화 외(2014)는 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를 대상으로 한국 행정 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 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는 공무원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의 노력: 세타가야구 사례

도쿄 23구 중 서쪽에 위치한 세타가야 구는 인구 약 890,927명(2016년)으로 도쿄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자치구이자 주민참여를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례지역이다. 세타가야구는 1975년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로 구청장을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와 공동체 만들기'를 구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78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의 기본구상'을, 1979년에는 기본계획을 책정하였으며 1982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과 행정이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1991년부터 세타가야구 특유의 3단계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90만 명 구민에게 하나의 구청이 있고, 그 아래 10~25만 명 정도를 관할하는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종합지소를, 다시 지역커뮤니티 단위로 약 3만 명 정도를 관할하는 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는 중앙의 행정개혁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구에서부터 분권화를 실현하고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한다는 생각에서 고유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세타가야구의 3단계 구정

또한 2009년부터는 세타가야구의 모든 과장 및 경력기간 3~5년 된 직원 전원이 27개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는 별도로 담당지역을 하나씩 정하고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함께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를 지역커뮤니티의 주요핵심으로 설정하여 2000년 시민활동 추진과 학교, 지역 간의 연계를 위한 '지역학교 연계과'를 개설하고 학부모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4년부터 구민이 참여하는 도시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4개월에 걸쳐 강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주민제안 발표회, 워크숍과 타운홀 미팅, 공모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조합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도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작위 추출과 NPO와의

협력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틀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구민참여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주민참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제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기존에는 동주민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정도에 참여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NPO와 시민단체, 방재, 안전, 도시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하게 되었으며 공모와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가 가능해졌다. 행정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마련한 결과, 신뢰를 통해 협치의 기반을 쌓을 수 있었으며 2016년의 경우, 321건의 시민단체 연계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민참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 프로세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정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분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⁴⁾

2)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담당하는 주민: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

약 140만 명이 거주하는 교토시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역사가 오래된 자치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1998년 NPO시민활동촉진법이 신설된 이후, 현재 1,200개의 NPO법인이 등록되어있으며 법인격 없는 봉사활동단체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가 존재할 정도로 시민활동이 열심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내 해결과제부터 결정하고자 2008년 교토시가 설립한 시민조직으로써 매년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이미 설정된 주제가 아닌, 백지 상태에서 교토의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행정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각각 구분한 다음, 각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00인 위원회의 60%는 처음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정도는 시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제도적으로 검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통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100인 위원회는 그보다는 교토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프로젝트 실행에는 위원뿐 아니라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표회, 마을만들기 미트업(Meet-up) 미팅, 성과 발표회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미디어 및 SNS 홍보, 기업과 시민단체와의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활동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성을 학습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한 5기 100인 위원회에서는 ‘커뮤니티 자전거’, ‘빈집 활용센터’, ‘전통산업 리스펙트(respect)’ 등 15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임기 종료 후에도 10개의 프로젝트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교토시에 소속된 13개 구 자체적으로도 100인 위원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100인 위원회 참여로 시민활동의 방법을 학습한 주민들이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주민주체로 성장하였다.

4)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2일차 자료집 중 세타가야구 발표자료 참조.

III.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제안

1) 다양한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행정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과 마을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주민참여는 성북구, 수원시, 광주 광산구 등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기존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발언할 기회가 없던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논의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하여 무작위 추출과 함께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주제별, 단계별로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한 예로, 한 번의 클릭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가볍게 참여하는 것부터 교육을 받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참여방식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야한다.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분야는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주민참여정책들이 있다는 것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행정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행정기관 등 기존의 홍보 루트를 관례적으로 반복하다보니 행정에 관심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변단체, 직능단체 등에 가입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모집이 안 되면 동원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⁶⁾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법률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고 쉬운 참여방식,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센터와 같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예산과 권한이 이양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은 이미 주제와 예산, 결과 등이 이미 결정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참고하는 수준이 머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주민들에게 예산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정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있으나 여전히 행정의 역할이 큰 실정이다. 교토시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가 의제를 선정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위원회에 적절한 예산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주민들이 관심있는 정책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⁷⁾ 이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제안한 사업에 대해 홍보하면

5)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은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황이나 맥락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견학과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전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김준용 씨는 희망제작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민참여방식에 대해 “버스정류장이나 일대에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야 한다. 문구를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문구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청 홈페이지 중심의 홍보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 관변단체에서만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의 주민참여체계는 참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나 이미 행정과 관계망을 형성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7) 10월 12일 포럼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무작위추첨제도로 운영한 주민참여예산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만난 주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던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주민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기회가 없어서 못 왔던 것이지 관심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러달라고 말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역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서 ‘내가 참여하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책효능감을 높이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참여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주민들에게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이나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청년층 등은 지역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거나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정책의도와는 달리 참여 기회 자체가 지역 내 자산을 소유하거나 기반이 있는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을 마을과 그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을 단위에서 해결가능한 미시적 문제도 있지만 민주적 정치와 복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와 참여를 강조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이나 지역 기반이 약한 청년층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서 노동과 임금문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분배구조 개선 등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운동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⁹⁾

3) 정책 주체로서의 주민

행정과 사회구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참여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책의 주체를 행정이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채 정책을 소비만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살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발언권이 있지만 침묵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발언하는 경우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반대운동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 주민의 구성이 비슷하고 소통도 잘되었지만, 지금은 파악도, 예측도 안 되고 파편화되어 소통도 어려운데다 마을에 관심있는 주민도 많지 않습니다.”(2016년 2월 18일 달팽이공부방,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적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원된 주민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아이디어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 8) 김상철은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2014)’에서 서울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자산)소유자들의 배타적인 마을만들기는 아닌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 9)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조건 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노동과 임금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민모임시간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에 맞출 것인지, 혹은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저녁이나 주말에 할 것인지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 등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주민참여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기본소득 및 청년배당 역시 불평등과 실업이 구조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시민들의 수준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의 수준은 달라진다. 이제 주민 스스로 자신을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권리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예로 지역축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 교토시민들은 자발적으로 1회용 식기를 재활용 식기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약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모금하였으며 2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끝에 쓰레기를 절반 가까이 감축할 수 있었다. 행정에게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무엇이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공공선’에 대해 고민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과 모임의 활동 재원은 모두 세금에서 나오며 주민들의 발언은 모두 공적인 의견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여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각자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면서 연대하는 것이 주민참여가 일상화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희망제작소 외(2016),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단체장과 해외연사가 함께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사례”
- 희망제작소 외(2016),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마을공동체로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정정화 외(2014), 한국행정의 주민참여정책 과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 김찬동 외(2014),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하승우 외(2014),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삶이 보이는 창

